

‘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처리 난항… 해외자금 이탈 우려

엇갈린 규제 세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입법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 확정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첫 시행 규칙을 확정 및 발표했다.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준비금 확보 의무, 상환 요청에 대한 처리 시한, 자본금 확보 기준,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지급 금지 등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세칙들은 내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의 최초 시행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美, 스테이블코인 시행 세칙 확정
발행 준비금·상환 기준 구체화
이자지급 금지 등 시장 규율 강화
EU·日 등 주요국 제도 정비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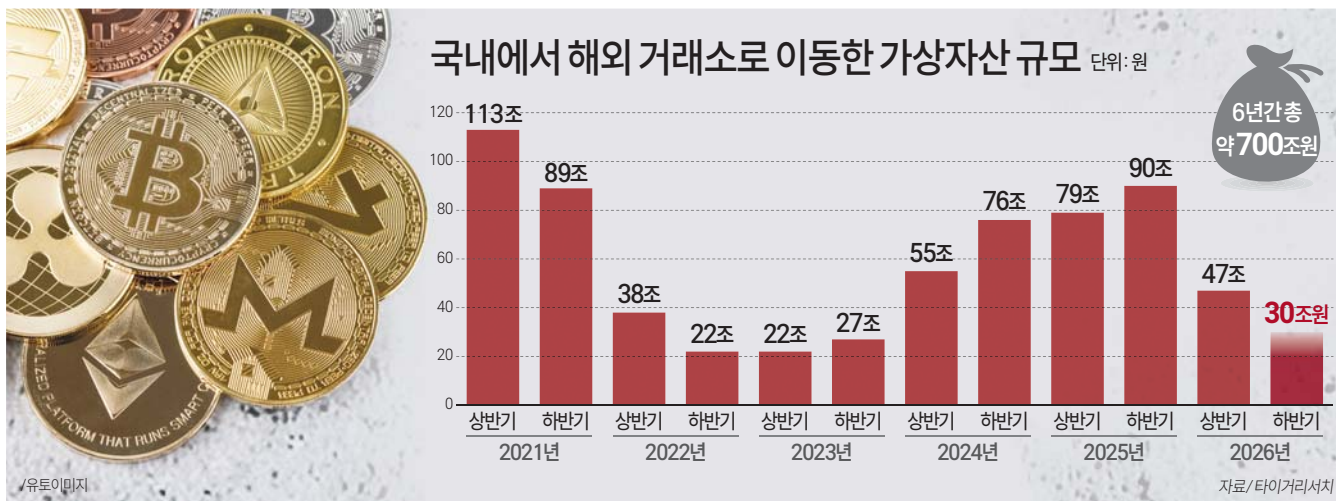
‘지니어스법’은 실제 통화가치와 연동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99%가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세칙에는 발행자의 이자지급 금지 의무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거래소가 지급하는 예치 보상은 허용하되, 발행자가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내용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서 주로 논의됐던 내용이나,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니어스법에 편입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미 규제 당국이 사실상 ‘발행자에 의한 직·간접적 이자 지급 행위의 원칙적 금지’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율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내다본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시장 안전성 및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마련된 셈이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입법 불투명

주요국의 규제당국이 시장 안전성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멈춰섰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과정이 사실상 멈춰서서다.

지난해 6월 여당이 최초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을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기초법’으로 평가받는다.

정차권과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과반 지분 확보 여부(은행 컨소시엄) 등 쟁점이 남아 있다.

은행 지분·거래소 규제 이견 여전
정부안 마련 지연에 국회 통과 난항
ETF·법인 거래 허용 논의도 정체
투자자 해외 이동 가속 가능성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점도 기본법의 입법 동력이 상실했다는 근거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9년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권에서 제도 및 인프라 부족, 투자자산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과세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기본법의 연내 입법이 현 시점에서 불가함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 입법 지연 시 ‘투자자 이탈’ 우려

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면 업권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 허용 ▲일반 법인의 가

상자산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 등 과도한 국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늦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다수 논의했으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발의 이후 기본법 체계 마련을 우선시 하면서 해당 논의들은 멈춰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품 다양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규제 불확실성 등 요인이 뚜렷해진다. 가상자산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차권의 움직임도 비빠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광일 의원실은 오는 11월 2일 국회에서 업계 및 금융위·재경부 등 부처 관계자를 초청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의원들은 여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의원들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기 입법을 주장해 왔다.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을 제한 문제 등으로 올해 초 제정됐어야 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1면 ‘靑,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가닥… 서 계속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정부도 고심

한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상자산 과세를 개시했다. 우리 정부 역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해외의 과세 정보도 수집할 수 있어, 예정대로 내년 부터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자 정부도 과세 유예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시행

시점은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 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도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